"정치개혁 등 책무 다하는 것이 민주당 출구 전략"

흔들리는 민주… 지역 정가 쓴소리

친명·비명 갈등에 당 분열 지속
강성 지지층 '낙선 명단'에 심화
"尹 정부 바라는 상황…힘 합쳐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켰지만 '이탈 30여표'에 당내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직면한 악재만 수습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광주 지역 텃밭 민심이 싸늘해지고 있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부결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표로 민주당 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탈표 의원들을 추리한 '낙선 명단' 등이 돌아다니면서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년여 남은 총선을 앞두고 내홍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셈이다.

이에 지역정가에서는 당내 핵심 인원과 국회의원의 시차 불일치에 따른 과도기 현상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내홍'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당내 비공개 의원 총회 등을 통해 당원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현 정권이 권력을 총동원해 제1야당 대표와 당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현 정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전 장관은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고, 민주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민주당 정치는 인간의 기본권 존중에서 출발하는 '개혁 정치'인데 반민주적인 독재 세력의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기권표에 대한 명단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배신자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며 "민주당 내부 분열이 윤 정부가 노린 점이다. 정부의 각본대로 춤출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단일대오로 힘을 모아 단호하게 윤 정부의 정치 수사에 맞서야 한다"며 "의원 간 입장차는 분명히 있다.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민주당을 위한 행보에 대해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가 낮아진 상태가 제1야당의 분열에 작용했다"며 "서로 의견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으려면 근본적인 신뢰가 전제돼야 하지만 당내에서조차도 믿음이 척박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당내 분열은 결국 주류·비주류 간 싸움이다"며 "이 대표가 선택한 당원들 입장에선 과도기에 의석수를 꿰차고 있는 비주류들이 못마땅한 것이다. 과도기에 따른 시차로 발생하는 불일치일 뿐 내년 총선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 내 '이탈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공천과 관련한 권력 다툼이 표결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반란표'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지만, 당내에 다른 목소리가 있단 걸 보여주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라는 의미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는 것이 방해·위협받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마무리하지 못한 정치 개혁 등 현재 상황에 맞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 민주당의 출구가 될 것이다"고 제언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무늬만 지역 업체 퇴출'… 전남개발공사, 현장 확인제 도입

입찰시 실제 영업여부 점검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허점을 노려 서류상으로만 본사 주소지를 전남에 둔 '무늬만 지역 업체'를 가리기 위해 계약체결 전 현장 확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7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은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일반용역·물품은 3억3000만원 미만까지 지역제한 입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한해 평균 30건의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입찰참여업체의 전남 소재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로만 확인했다.

그러나 타지역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전남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사는 수주기회를 얻지 못하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계약단계부터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확인제도는 입찰공고부터 안내가 이뤄지며, 개찰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을 위한 사무 공간, 최소한의 사무설비, 직원 상주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지역 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적격심사 부적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또 계약체결 전 적격심사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심사서류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계약행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업체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 시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박간재 기자

강 시장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도시 광주 만들 것"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강기정(사진) 광주시장은 7일 "고령화·저출생 시대의 틈새를 메워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봄과 함께 찾아온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주제로 열린 정례조회에서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했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며 법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 당시 전 국민 고용보험, 치매국가책임제 등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옳다고 믿기에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했다"며 "전국 첫 사례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앞으로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이미 성공하고 박수받을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령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시민 모두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고자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장 안전하고 믿음직한 도움의 손길을 드리는 것이 전국 어디에도 없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지 기자